

2023. 04. 13.(목) 조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4월 1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

안심돌봄복지과장	하동준	2133-7370
복지사업팀장	최원환	2133-7379
담당자	허선미 이병구	2133-7380 2133-7384
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	이준형	2133-7505
어르신건강관리팀장	김정옥	2133-7580
담당자	이현정	2133-7582

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: 4쪽

서울시,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동주민센터 패러다임 전환

- 기존 찾동 사업을 ‘복지·건강중심’으로 개편,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역량 집중
- 시정슬로건 및 핵심가치에 맞춰 ‘찾아가는 동주민센터’를 ‘동행센터’로 변경
- 종합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교재 제작·교육 실시 등 동 통합복지 상담역량 강화
- 「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」 입법예고

서울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 및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존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‘복지·건강중심 동주민센터’로 개편한다.

- 코로나19 등 감염병, 화재·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장기적 경기 침체 등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경제적,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와 복지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선별 발굴·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.
- 이에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실현하고자 시는 기존 동주민센터 기능을 복지·건강분야 중심으로 재편하여 동의 역할을 강화한다.

- 이번 동주민센터 개편안은 ▲ 찾동 사업 범위를 복지·건강 분야에 집중 ▲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▲ ‘찾아가는 동주민센터’에서 ‘동행센터’로의 명칭 변경 ▲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칸막이 제거 및 통합복지 상담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.

- 먼저 동주민센터 역량을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에 집중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편방문에서 빈곤·위기가구 중심의 선별 방문·신속 지원으로 전환하여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.
 - 시는 2015년부터 찾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보편방문을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·사적공간 등의 이유로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,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여 동주민센터 역량을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에 집중할 필요성을 체감하여 빈곤·위기가구 중심으로 선별 방문·신속 지원으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.
 - 위기정보 빅데이터(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)로 확보된 정보와 구·동별 여건을 고려한 자체지표 등을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집중 조사·관리하고 긴급한 지원·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「선 지원·후 검증」 제도를 정착하여 실시한다.
 - 돌봄SOS 서비스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85%에서 100% 이하로 확대하는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한다.
 - 또한 기존 찾동 사업에서 기 종료된 마을, 주민자치는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업범위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·지원에 관한 내용과 돌봄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높였다.

-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을 확대하여 동 단위 지역사회 복지역량을 강화한다.
 - 통장·반장,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사회 내 소외된 위기가구를 자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.
 - 지역 복지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‘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’ 및 ‘사회적 고립가구지원센터’와 동주민센터가 연계·협업하여 복합적 위기가구, 지원 거부가구 등 고난도 위기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.
 - 또한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시민 접점기관(우정사업본부, 한국전력공사, 도시가스협회 소속 검침원 등)과도 협력하고 지역주민 인적자원(편의점 등 지역 내 생활업종 종사자,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)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민·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단위 지역사회 복지역량을 한층 강화한다.

- 아울러, 민선8기 시정 슬로건인 ‘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’과 시정 핵심가치인 ‘약자와의 동행’에 맞춰 ‘찾아가는 동주민센터(찾동)’ 이름을 ‘동행센터’로 변경하고, 동주민센터 통합복지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담당 전직원 상담전문관 지정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.
 - 시는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칸막이를 제거하고 현장 복지업무 공무원 간 대응역량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업무 담당 누구나, 복지 전문분야에 대한 통합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.
 - 복지업무에 대한 칸막이를 제거하고 신속한 대민상담이 이루어지도록
 - ▲ 동 복지담당 전직원을 복지상담전문관 지정·운영
 - ▲ 종합적인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 과정을 신설·실시한다

- 건강분야의 경우 저소득 독거어르신, 빈곤·돌봄위기 가구 중심으로 전환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강화한다.
 -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가 건강취약계층 및 빈곤·돌봄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건강평가를 실시한다.
 - 또한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와 보건(지)소의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가 완결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.

- 시는 이러한 동주민센터 개편 내용을 반영한 「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찾동 조례) 전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에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 찾동 관련 조례는 하나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있던 찾·동 지역사회보장 기능강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, 그 내용을 찾동 조례 부칙조항에 포함하였다.

- 이번 조례 개정안은 13일 입법예고를 한 뒤, 5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

-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“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동주민센터가 복지업무의 중추가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. 하지만,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 위기상황과 변화된 복지환경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의 한계가 드러나며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가구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.”라면서 “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동주민센터 업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춰 개편하여 위기가구에게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제공하는 역할을 동주민센터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”라고 밝혔다.